

22. 5. 21. 1차 특임 해경학

1. 다음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발족되어 영해경비, 어업자원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 ② 해양경찰대는 1955년 소속부처가 교통부 산하 해무청으로 이관되고, 조직 명칭이 '해양 경비대'로 개칭되었다.
- ③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 ④ 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다.

[1번 해설] ②

- ② (X) 교통부 산하 해무청 ⇒ 상공부 산하 해무청

2.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경비법」
- ㉢ 「수상레저안전법」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환경관리법」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어선안전조업법」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번 해설] ②

㉠㉡㉢㉣㉤ 또한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아직 시행하기 전)이 있다

2.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경비법」
- ㉢ 「수상레저안전법」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 「해양환경관리법」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어선안전조업법」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번 해설] ②

㉠㉡㉢㉣㉤

**3.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 ② 강등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③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3번 해설] ②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강등의 경우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책무(제2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번 해설] ④

④ (X) 해양경비법의 목적이다.

**5.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상 '중앙해양특수구조단(부산소재)'의 소속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 ②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 ③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④ 부산해양경찰서

[5번 해설]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6. 다음 중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으며, 그 적용도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 ③ "참새를 쫓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적합성의 원칙을 말한다.
- ④ 해양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도중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대방 눈 한쪽이 실명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힘들다.

[6번 해설] ③

- ③ (X) 적합성의 원칙 ⇒ 상당성의 원칙

7.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 검색을 하는 경우 선장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
- ② 성명
- ③ 소속
- ④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

[7번 해설] ①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②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 ③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④ 대간첩·대테러 작전

[8번 해설] ④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9. 함정운영 관리규칙상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고 취역순서(함정번호순서)로 명명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 ②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③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 ④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9번 해설] ③

**함정운영 관리규칙 제8조(함정 명명) ①** 경비함정은 톤급별 명칭을 지정 취역순서(또는 함정번호순서)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2.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3. 1500톤급 : 제민 1호, 2호, .....
4. 1000톤급 : 한강 1호, 2호, .....
5. 500톤급 : 태극 1호, 2호, .....
6.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 해우리 1호, 2호, .....
7. **25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10. 다음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조직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 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며,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 ① 출장소
-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 ③ 순찰형 출장소
- ④ 구조거점 파출소

[10번 해설] ④

11. 다음 중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처벌'에 있어 직접적용 가능한 법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비법」
- ② 「선박안전 조업규칙」
-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

[11번 해설] ②

「선박안전 조업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내 어선의 출입항신고, 출어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던 규칙이었고, 현재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대부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 수난사고
-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③ 해양 선박 사고
- ④ 해외에서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

[12번 해설] ①

- ②③ : 해양수산부
- ④ : 외교부

1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②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 ③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은 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④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3번 해설] ③

③ “구조” ⇒ “구난”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 다음 중 오일펜스를 전장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출유의 확산 방지
- ② 유출유로부터 환경민감지역(어장, 양식장 등)의 보호
- ③ 유출유의 자연방산을 촉진
- ④ 유출유의 회수효율 향상

[14번 해설] ③

③ (X) 오일펜스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출유의 자연방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처리제를 사용한다.

15.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없을 때
- ④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5번 해설] ④

④ (X) 장기 2년 이상 ⇒ 장기 3년 이상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16.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할 운항규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②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

지 않아야 한다.

④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16번 해설] ①

① (X) 왼쪽에 ⇒ 오른쪽에

**17.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분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조정관이 된다

④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번 해설] ③

① (X)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동법 제6조 제1항).

② (X) 40명 이하 ⇒ 20명 이하

④ (X)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 중앙·광역기술위원회는

시행령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18. 다음 중 해상 음주운항 단속업무에 관한 직접적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③ 「수상레저안전법」

④ 「해사안전법」

[18번 해설] ①

②③④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있다.

**19. 불법조업선박 단속에 관한 근거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적 근거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한·중 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
- ②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영해에서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한 대륙붕에서는 불법 어로 단속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어업 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9번 해설] ②

② (X) 영해에서 어로행위는 불가능하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절차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인지→초동조치→수색→구조→사후조치
- ② 인지→초동조치→수색→사후조치→구조
- ③ 인지→수색→초동조치→구조→사후조치
- ④ 인지→수색→초동조치→사후조치→구조

[20번 해설] ①